

금융빅뱅 인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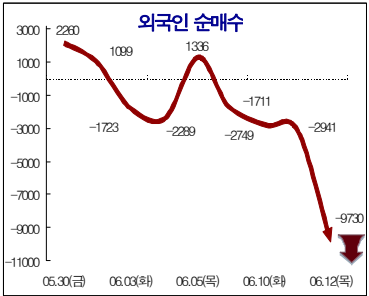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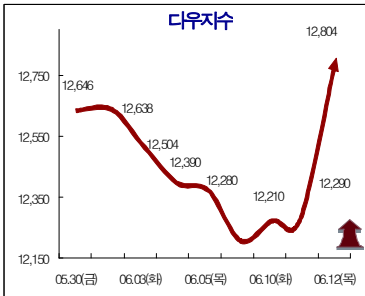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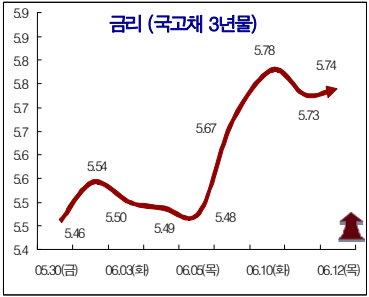


- 자본 시장 분석
- 글로벌 긴축과 채권시장
- 금융 빅뱅 이슈
-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 본 자료는 주요 투자자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 금융 빅뱅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증권사와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증권 : 한동욱 연구위원 (2014-1708, tuksan.han@hdsrc.com)
- 현대경제연구원 : 박덕배 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금융빅뱅 인사이트

月間 主要 經濟 指標 (05.30 ~ 06.12)



- 자본 시장 분석
 - 글로벌 긴축과 채권시장
- 금융 빅뱅 이슈
 -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목차

자본 시장 분석

- 글로벌 긴축과 채권시장 1

금융 빅뱅 이슈

-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11

□ 글로벌 긴축과 채권시장

1.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 실물자산 성과 우위

스태그플레이션은 **과도한 통화공급과 재정확대 이후 물가관리를 느슨하게 한 경우**에 발생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직전까지, 주식과 채권보다 실물자산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월했다.

2. 과잉유동성의 상품시장 집중이 인플레이의 원인

신용경색은 풀려있던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을 돌려놓았다. 2007년 중반 이후 달러약세는 빨라졌고, **유동성의 상품시장 집중유입으로 상품가격 상승폭도 급해졌다.** 글로벌 인플레이도 빠르게 상승했다.

3. 통화강세를 위한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시그널

취약한 펀더멘털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우선 자국통화의 강세를 통한 인플레이 완화를 시도할 것이다.** 실제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매파적인 시그널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플레이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4. 한국은행의 대응

1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원화강세 정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긴축과정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최대한 늦춰지겠지만, **국내 채권시장의 불안감은 먼저 반영될 것이다.** 이미 그 과정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다. 중기적인 약세 view를 유지한다.

5. 채권시장의 단기적인 반전모멘텀은 달러강세

긴축을 배경으로 한 **달러강세는 상품시장으로 물려가던 유동성 집중을 완화시킬 것이다.** 원/달러도 하락한다면 **채권금리는 반락할 수 있다.** 유럽이 동의해준다면, FRB의 긴축 시그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국내 채권금리의 하락요인이 될 수 있다.

□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1. 절실한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

최근 국내경제가 예상보다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 돌파구 마련이 마땅치 않다.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이나 금융완화 정책은 자칫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시장시스템에 의해 거시적 경기부양의 혜택이 수출기업과 대기업들에게만 국한되면서 투자 효과가 미약하여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서민경제와 밀접한 중소기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전체의 육성이 절실하다. 이중에서도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이는 일반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2.6배, 매출 3.2배, R&D 투자 3.4배 등 그 부가가치가 높아 경기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서도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2000년 벤처버블 붕괴 이후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어려운 자금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그 수가 2000년 이후 약 2.5배 증가하였지만 이에 따른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 부진의 원인

첫째, 간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최근 은행 간 수익성 경쟁이 격화되고 경영 자율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정책 개입은 어렵다. 특히 2008년부터 바젤 II(신 BIS 자본협약) 시행에 따른 기업 신용리스크 차별화 적용은 향후 중소기업 금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적 금융의 순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의무대출비율 제도는 시중은행의 의무대출비율 준수 실적이 저조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와 연계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또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총액한도대출 제도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개인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코스닥시장을 통한 벤처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2001년 벤처버블 붕괴 이후 급등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피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시장을 회피하고 있다. 최근 개인의 직접 주식매입이 늘어가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벤처 중심의 개별기업 주식보다도 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성향이 변화된 상태다.

넷째,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초기단계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주 자금공급자인 창업투자회사는 2000년 147개 업체에서 2008년 3월말 98개 업체로 줄어들고 있다. 벤처펀드의 경우 2002년 이후 신규 조합결성 보다 조합해산이 많아지면서 조합금액은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다.

다섯째, 기술기업에 대한 변별력 취약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시혜적 혜택을 목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수혜 기회를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책금융에 의한 기술금융은 시장기능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장조성에 대한 이정표 없이 추진된 경향이 많았다.

3. 문제점과 개선 과제

우리 경제는 일시적 효과를 지닌 거시적 처방으로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 상황을 쉽사리 극복하기 힘들어 보인다. 더욱이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 고용 창출이 쉽지 않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른 대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시급하다. **다행이 최근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2000년 벤처버블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 시스템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시장금융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정책금융의 유효성은 유지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장금융과 명백한 차별화되어야 한다. 독일의 부흥은행(KfW)처럼 다원화된 정책자금 융·출자 지원을 중소기업 전문 금융 공적기관 등을 설립하여 단일화시킬 필요도 있다. 또한 경영간섭이 없는 메자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와 경로의 자금공급 시스템을 확충하고, 지원방식도 민간의 효율성을 이용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근거로 한 기술금융이 혁신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보증기능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기술과 금융의 연계를 제고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술거래를 활성화하여 사업실패가 기술의 시장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등 민간 기술금융시장의 조성하여야 한다.

셋째, 혁신금융의 필요성이 매우 큰 현실에서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크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달리 위험을 상품화하여 적극적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기업의 탄생부터 성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밀착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09년 2월 자동법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회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지면 이들이 중소기업금융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혁신금융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각종 정책자금, 공적보증의 틀 안에서 취해져온 저리의 시혜적 지원을 줄여 나가는 한편,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정보가 금융기관에 원활히 제공되어야 하고 금융기관도 거래기업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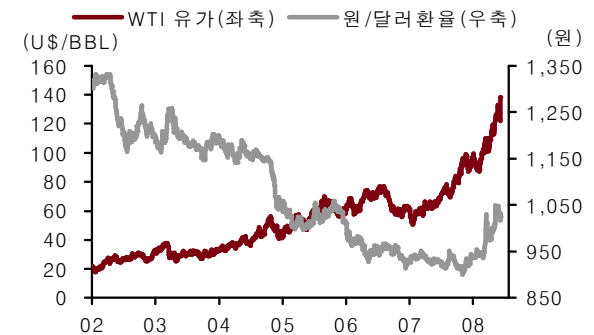
글로벌 건축과 채권시장

1. 3/4 분기 중반 이후 물가안정 기대에 대한 의심

○ 유가 사상최고치 경신

- 안정되는 듯하던 국제유가가 이틀(6/5-6) 만에 16달러 이상 폭등했음
 -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하면서 몇 개만 느껴졌던 150달러도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음
- 미국에서는 한창 유가 급등의 배후 찾기가 진행 중임
 - 미국 금융감독당국은 국제 원유선물시장에서 투기세력을 조사하고 있고, 골드만삭스 등 유가상승을 전망했던 투자은행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음

유가 급등, 사상최고치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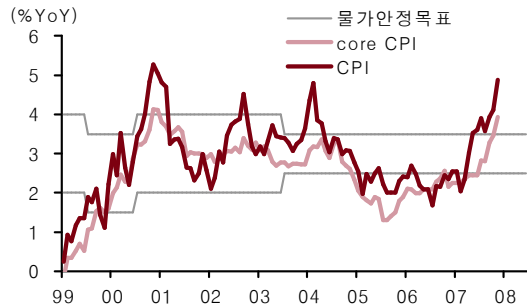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Datastream.

○ 소비자물가, 3/4분기 중반 5%대 중반까지 상승 후 안정이 컨센서스

- 국내에서도 5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대비 4.9%까지 급등했으며, 2001년 6월 5.0% 이후 최고치임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언제까지, 얼마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음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작년 기저효과로 인해 3/4분기 중반까지 올라간 후 완만하게 하락할 것이며 고점은 5%대 중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의 컨센서스이며, 물가가 예상경로를 벗어날 가능성은 없는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



자료: 한국은행.

2. 과잉유동성의 상품시장 집중 유입이 인플레이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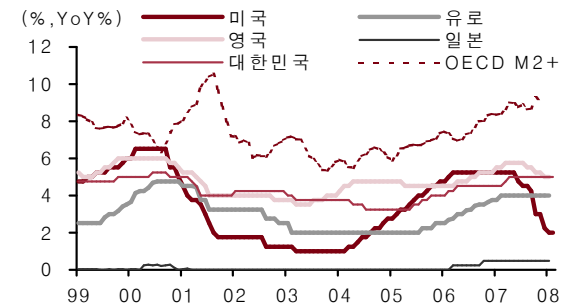
○ 중앙은행의 대응

- IT버블 붕괴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2001년부터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했음
 - 미국은 2004년 중반까지 정책금리를 1%로 유지했고, 유로는 2005년말까지 2%, 일본은 2006년 중반까지 제로금리정책을 고수했으며, 한국은행도 2005년 중반까지 콜금리를 3.25%로 유지했음
 - 초저금리 덕분에 부동산 등 자산가격들이 상승했고, 부의 효과로 경기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자 중앙은행들은 긴축을 시작했음

○ 신용경색 본격화 이후 글로벌유동성, 상품시장 집중 유입

- 그러나 2007년 중반 이후 상황은 달라졌으며, 서브프라임 이슈가 본격화되었음
 - 충분한 긴축 이전에 발생한 신용경색은 미국으로 하여금 2007년 말부터 다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도록 만들었음
 - 미국은 7개월 만에 정책금리를 325bp를 인하했고, 선진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 속에 새로운 경로들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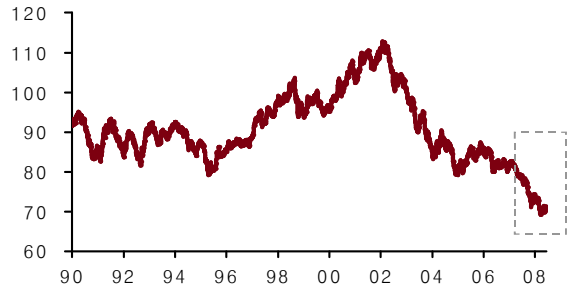
주요국 중앙은행 정책금리와 통화량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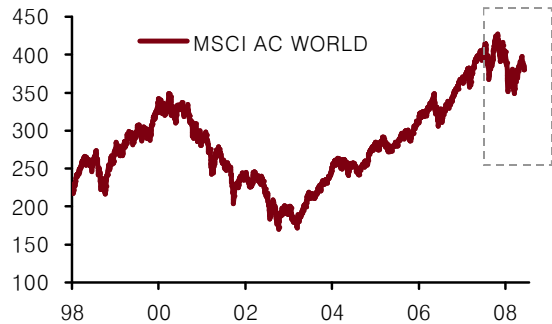
자료: Thomson Datastream, OECD.

- 신용경색에 의해 달러약세는 빨라졌고, 이전까지 주식시장 등으로 분산, 유입되던 글로벌 유동성은 상품시장으로 집중 유입되었음
- 유가 등 상품가격의 상승폭도 가팔라진 반면 글로벌증시는 자금유입이 주춤하며 작년 4/4분기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해 준다고 생각했던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동 시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잠잠하던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빠르게 상승했음
- 2004년초 5%대 초반이었던 OECD국가들의 통화량(M2+) 증가율은 올해 3월 9%를 넘어서며 여전히 상승 중임

미국 달러화인덱스, 2007년 하반기 이후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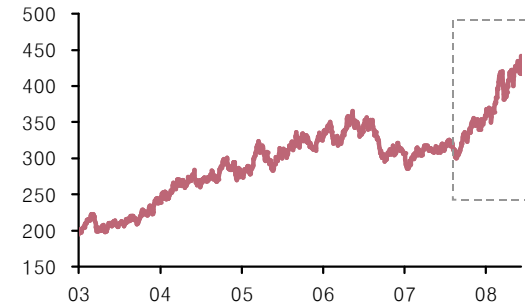


글로벌증시, 2007년 하반기 이후 약세 흐름



자료 : F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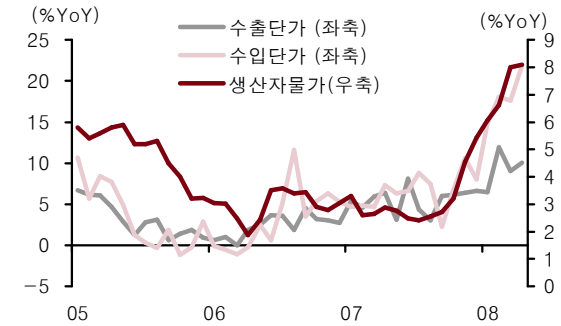
상품가격, 2007년 하반기 이후 급등



참고: Reuters/Jefferies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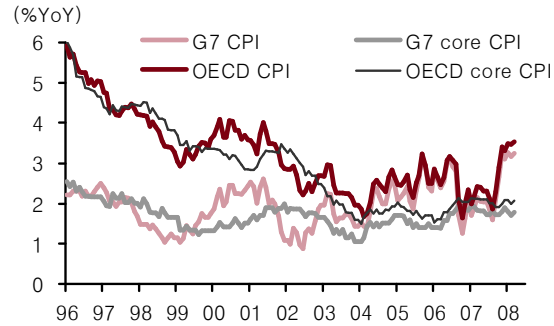
자료: ThomsonDatastream.

중국 생산자물가, 2007년 하반기 이후 급등



자료: Bloomberg.

글로벌 인플레이션, 2007년 하반기 이후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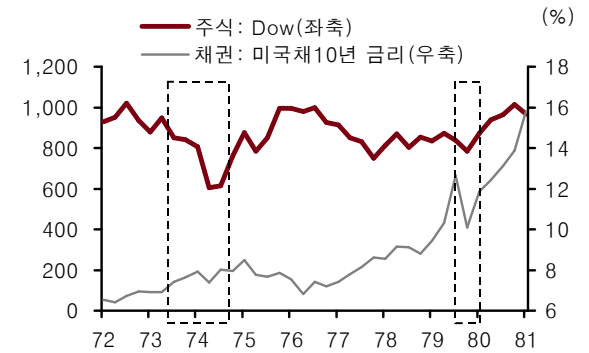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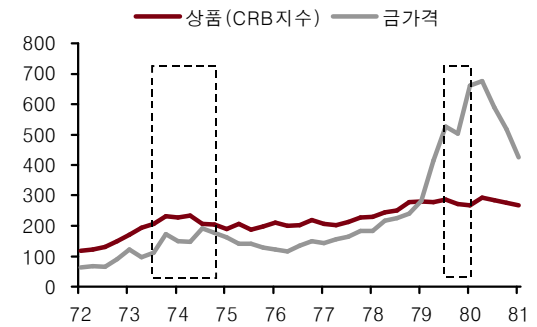
○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 실물자산 성과 우위

- 1970년대 중반과 1980년대 초반 나타났던 두 차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은, 시장에 풀려있는 과도한 유동성을 자연스럽게 상품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만들었음
 - 두 번 모두 과도한 통화공급과 정부부문의 재정지출 확대 이후 물가관리를 느슨하게 한 경우에 발생했고, 주식과 채권가격 하락에 비해 실물자산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월했으며,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직전까지의 흐름은 보다 뚜렷했음
- 현재 글로벌 펀더멘털과 늘어난 유동성을 고려할 때 유가 등 상품시장에 투기세력이 끼어있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움
 - 유동성이 흡수되지 않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자금유입에 의한 상품가격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주가 및 금리 추이



미국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상품 및 금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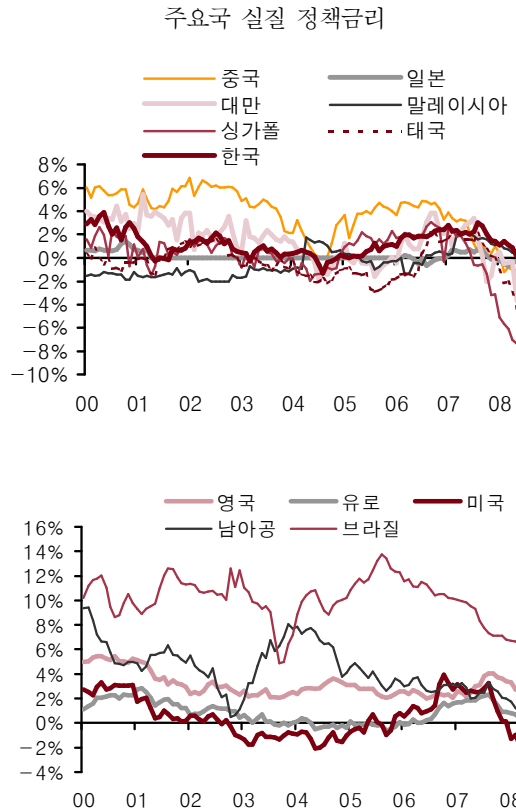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Datastream

3. 글로벌 긴축과 우리나라의 정책대응

○ 증가하는 유동성

- 대부분 국가들의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이거나 마이너스권에 근접했음
- 유동성이 흡수될 여지가 없으며, 최근 말레이시아, 대만 등은 유가급등에 따른 재정부담 증대로 국내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지만, 국내에서는 유가 환급금 등을 통해 10.5조원을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음
- 나라 안팎에서 유동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



자료: Bloomberg.

○ 글로벌 유동성 축소 필요

-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상품가격 상승에 기인하는 공급측면에서 발생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입장에서 금리인상 대응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음
- 그러나 과도하게 풀려진 유동성이 과거 경기침체와 인플레이 상승기의 경험으로 몰려간 곳이 상품시장이었고 그래서 인플레이가 급등했다면 결론은 달라짐. 인플레이 안정을 위해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필요함
- 방법은 1) 금리를 인상하거나, 2) 경기둔화로 통화수요 자체가 감소해야 한다. 금리인상은 그 자체로 채권금리 상승요인이며, 통화수요 감소는 스테그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황을 의미한다. 주식과 채권가격 모두에 좋지 않음

○ 통화강세를 위한 중앙은행들의 매파적 시그널

-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 펀더멘탈의 취약성은 금리인상을 시작하기 어렵게 만든다. 1차적으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자국통화의 강세를 통한 인플레이 완화를 시도할 것임
- 실제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매파적인 시그널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고, 이미 미국과 유럽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음
- 문제는, 전세계 통화가 모두 강세로 갈 수는 없다는 점이고, 금리인상이 필요하며 금리인상은 자국의 내수를 위축시킬 것임
- 그러나 그냥 둔다면 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으며 내수는 더 나빠질 수 있음

○ 1차적으로는 원화강세 정책

- 1차적으로 우리나라도 원화강세 정책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음. 좁은 박스권에 갇혀있던 원/달러는 좀 더 하락을 시도할 것임
- 그러나 원화강세 정책은 외환보유고 감소를 가져오며, 글로벌 신용경색 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외채가 많은 우리나라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스러우며 원화강세 정책은 한계가 있음

○ BoK의 금리인상은 지연 가능성 고조

- 글로벌 유동성이 흡수되는 긴축과정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최대한 늦춰질 것임
 - 그러나 자국통화 강세와 함께 미국과 유럽이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국내 채권시장의 불안감은 선반영될 것이고, 이미 그 과정이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으며, 중기적인 약세 전망을 유지함

○ 단기적인 반전 모멘텀은 달러강세

- 단기적으로 채권시장의 반전 모멘텀은 달러강세가 될 수 있으며, 미국의 긴축 압박을 배경으로 한 달러강세는 상품가격 안정을 통해 인플레이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 상품시장으로 몰려가던 유동성 집중이 완화되고, 원/달러도 하락한다면 채권금리는 반락할 수 있으며, 다가올 G7 재무장관회담에서 완만하면서 주기적인 달러화 강세에 유럽이 동의해준다면, FRB의 매파적인 시그널은 아이러니컬게도 국내 채권금리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한동욱 연구위원 (2014-1708, tuksan.han@hdsrc.com)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1. 절실한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

○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계가 예상되는 거시정책 보다 미시 정책이 바람직한 바, 그 일환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지원이 절실함¹⁾

-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이나 금융완화 정책은 자칫 물가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음
 - 금년 5월 소비자물가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크게 벗어난 전년동월대비 4.9% 상승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8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를 예상
- 시장시스템에 의해 거시적 경기부양의 혜택이 수출기업과 대기업들에게만 국한되면서 투자의 효과가 미약하여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 대기업의 경우 풍부한 내부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자제함
 -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금융지원이 신용이나 담보여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게는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모험자본투자기업(벤처기업), 기술혁신 능력에 관한 엄격한 평가를 거친 기업(기술혁신형기업, Inno-Biz), 기타 혁신 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기업 등을 일컫음. 일반 중소기업과 달리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유연성, 차별화를 통한 창의성,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정신이 강한 혁신성, 한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문성 등의 특성을 지님

- 그러나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투자 증대로 이어질 경우 고용이 창출되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는 1963년부터 2006년까지 43년간의 통계치 비교에서 제조업 전체의 고용 증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22.6%(56만명)와 77.4%(193만명)으로 중소기업의 비중이 월등 높음
 - 2006년 기준 제조업 중소기업 11만 7,650개 중 약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2.6배, 매출 3.2배, R&D 투자 3.4배 등 높은 성과를 지니고 있음
 - 일본의 장기불황 극복 원인의 하나로는 기존 중소기업의 혁신형 사업전환 유도도 경쟁력을 제고시킨 점을 들 수 있음

○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중소기업 대출 여건도 개선되고 있으나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금융은 매우 취약

- 은행권의 대출규모(원화대출금 기준)는 2002~2003년 당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2004~2005년 급감하였다가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
 - 그 결과 '07년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금은 371.6조원이며, 이는 전체 기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육박
 - 풍부한 유동성을 지닌 국내 은행들은 DTI, LTV 등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따른 대안으로 2006년 중 45.3조원, 2007년 중 68.4조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중소기업대출 확대, 대출금리 하향화, 신용대출 확대 등 차입조건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됨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02중	'03중	'04중	'05중	'06중	'07중 ^p	'07말 잔액 ^p
중소기업	37.4	36.4	5.7	12.8	45.3	68.4	371.6
일반중소기업	17.6	18.2	1.7	10.9	31.6	49.3	247.1
개인사업자	19.8	18.2	4.0	1.9	13.7	19.1	124.5

자료 : 금융감독원.

주 : 원화대출금 기준.

- 그러나 기술력, 성장력은 뛰어나지만 경영기반과 신용이 취약한 혁신형 중소기업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력 부족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중소기업 대출도 주로 우량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 금융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임
 -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채널이 취약하고, 보증기회가 줄어들면서 어려운 자금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입금의존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2006년말 현재 중소기업 30.9%, 대기업 18.1%) 있는 가운데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 간에도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중소기업 대출이 제조업 보다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등 비제조업에서 집중되고 있어 경제성장 기여가 미약함(2005년말 현재 중소기업 비제조업 대출 비중은 61.5%에서 2007년 11월말 63.9%로 증가)

업종별 중소기업대출 비중

(단위 :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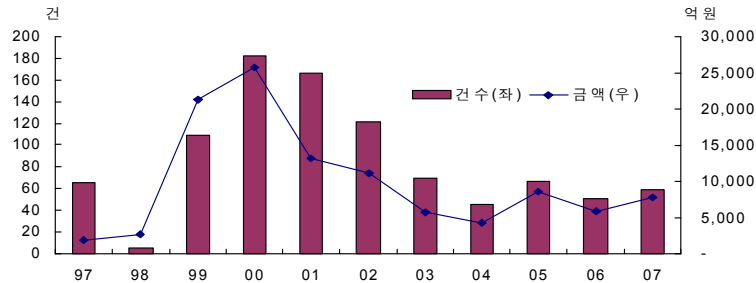
	'05년말		'06년말		'07.11말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제조업	98.9	38.5	112.3	37.2	134.9	36.1
비제조업	157.7	61.5	189.5	62.8	238.8	63.9
건설업	21.5	8.4	28.1	9.3	38.3	10.2
도소매업	38.5	15.0	44.3	14.7	54.3	14.5
부동산업	33.7	13.1	44.9	14.9	61.3	16.4
합계	256.5	100.0	301.8	100.0	373.7	100.0

자료 : 금융감독원.

○ 한편 원천적으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은 자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에 의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은 매우 낮음

- 코스닥시장 등을 통한 자금조달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심각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 규모나 비중이 대기업과 비교하여 크게 위축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활용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직접금융의 87%는 대기업 위주로 운용
 - 특히 금융채와 자산유동화 증권을 제외한 경우 회사채비중은 1.1%만 중소기업 대상임
- 특히 벤처붐 붕괴 이후 중소기업들의 코스닥시장 등록요건 강화 등으로 인하여 코스닥시장 등을 통한 주식발행이 크게 감소함
 - 주식발행이 2005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2006년 17,512개, 2008년 24,719개)의 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움을 시사
 - 프리보드(Freeboard)시장 역시 2008년 5월말 현재 등록 회사 수로는 53개, 종목 수로는 55개로 아직 실적이 매우 저조²⁾

코스닥시장 주식발행실적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2) 프리보드 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나 상장이 폐지된 주식의 매매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증권업협회가 개설·운영하는 시장으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기존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에게 직접 금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설립됨

2.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 부진의 원인

(1) 간접금융 지원 약화

○ 어느 국가나 중소기업은 간접금융 의존도가 큰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 간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한계에 도달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높은 대출 취급비용에다 바젤협약에 따른 자기자본 적립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위축
 - 그동안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특수은행의 존재, 정부의 총액대출한도 제도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³⁾
 - 은행 간 수익성 경쟁이 격화되고 경영 자율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정책 개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젤 II(신 BIS 자본협약)도 향후 중소기업 금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⁴⁾

- 한편 이들 간접금융기관에 의한 중소기업 금융지원은 주로 성공 단계 이상에 도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상업은행 대출은 원천 자금인 예금이 안전하게 보관·운용되어야 한다는 제약으로 인하여 주로 성숙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자금난에 처한 수많은 창업준비 및 창업초기 기업, 혁신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더욱이 혁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은행대출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업력이 짧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은행대출 접근성이 더욱 악화

3) 총액대출한도제도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제도로서 각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른 저리 자금의 차등 배정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 1994년부터 운용

4) 1998년부터 시행되어온 '바젤 I' 과는 달리 차주의 신용리스크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 적립 부담을 차등화 함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신용도가 낮게 분류된 경향이 많음에 따라 중소기업 대출이 신용도별 양극화와 함께 전반적으로 위축될 개연성이 있음

(2) 제도금융 기능의 축소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 총액대출한도비율 등 은행을 통한 대출 확대 지원 제도는 당초의 순기능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제도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내포하는데, 최근의 금융 시장 개방 추세는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소지가 있음
 - **순기능:** 은행 대출을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우선 지원부문(중소기업)으로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부담 없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은행의 자금배분을 유도할 수 있음
 - **역기능:** 은행의 여신운용을 규제하고 있어 시장기구의 자율성에 의해 조정되는 자금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음

- 의무대출 비율 제도는 총액한도대출 제도와 연계되어 운영되지만 시중은행의 의무대출 비율 준수 실적이 저조하여 연계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
 -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금융 애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은행의 접근성 제약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기준의 적격업체 중심으로 적용되는 동 제도가 갖는 유용성은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제한적일 수 있음

-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
 - 2007년 3분기 현재 이전의 9.4조원에서 6.5조원으로 축소
 - 2004.11~2006.2 기간 2.0%를 유지하였다가 2006.2월 이후 점차 상승하면서 2007년 8월 3.25%로 총액대출의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
 - 운용 주체의 입장에서 총액대출한도 제도 자체가 중소기업 의무 대출 비율 제도의 유인 체계가 약화⁵⁾
 - 대출규모 보다는 대출의 질적인 측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실적 등과 연계한 제도 운용이 더 유용한 것으로 판단

- 한편 외환위기 상황에서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급증세를 보였던 신용보증 지원이 경제가 정상적인 국면으로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상화되지 못한 부문에 대한 신용보증 규모 축소 논의

5)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총재가 총액대출한도 감축 및 기존대출금 회수 조치를 취함

- 기획예산처는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의 신용보증 출연예산을 2005년의 6500억원에서 2009년 3000억원으로 축소한다는 계획
-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에서 신용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24.5%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말 15.1%를 기록
- GDP 대비 신용보증잔액 비율이 독일 0.23, 미국 0.14, 영국 0.04 등 일본을 제외한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 과다

주요국의 신용보증제도 비교

구분	공공보증제도		상호보증제도	용자보증제도	
	한국('05)	일본('05)	독일('04)	미국('04)	영국('04)
GDP대비 신용보증규모비율	5.7%	5.7%	0.23%	0.14%	0.04%

자료 : 신용보증기금, 「세계의 신용보증제도」 2006.

(3) 개인들의 위험투자 회피

○ 2001년 벤처버블 붕괴 이후 개인들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코스닥시장을 통한 벤처 투자 기피

- 1999년 닷컴 붐으로 시작된 벤처기업 열기가 버블화되면서 2001년 붕괴됨
 - 지난 1998년 외환위기에 발목이 잡혀 있던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시장은 닷컴 붐에 힘입어 엄청난 활황을 보이면서 2000년 3월, 당시 코스닥지수는 2,925.50으로 사상 유례없는 최고치로 치솟음
 - 2001년 하반기 닷컴 붕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코스닥지수는 꾸준히 하락하면서 2004년 8월 320.54까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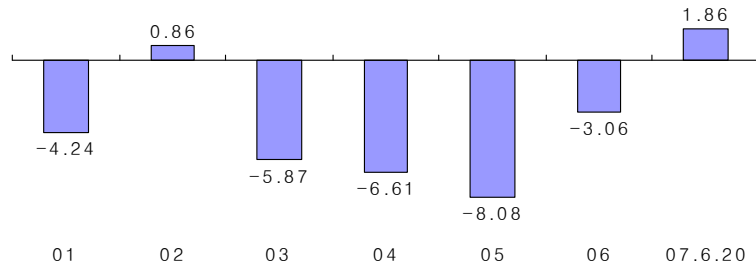
- 급등락의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피해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 특히 코스닥시장을 회피
 - 1999년 418만 명이었던 주식투자 인구가 2006년 말 361만 명으로 감소⁶⁾
 - 상위 1%도 되지 않는 개인투자자가 전체 개인 보유주식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등 대주주와 큰손들을 제외한 일반인들의 주식보유율은 매우 미미⁷⁾

6) 이를 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1999년 19.3%를 차지했던 주식투자인구가 2006년 15.2%로 줄어짐

7) 1,000주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전체 주주의 약 58%이나 보유주식의 시장가치 비중은 3.2%에 머물고 있음

- 개인의 직접 주식매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벤처 중심의 개별기업 주식보다도 우량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성향이 변화됨
- 개인의 순매수규모를 보면 2001년 이후 대체적으로 큰 폭의 순매도를 지속했고, 2006년 들어 완화되다가 2007년 이후 순매수로 접어드는 양상

개인의 주식 순매수규모 추이



자료 : 증권거래소(2007.6.27 보도자료).

(4) 벤처캐피탈의 역할 약화

- 2001년 벤처금융이 붕괴되고 나서 벤처캐피탈의 역할이 약화되면서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이 어려워지고 있음
- 벤처기업에 대한 용자가 아닌 자본을 투하하는 대표적인 형태인 벤처캐피탈은 2001년 벤처거품 붕괴 이후 침체상태에서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벤처기업의 주 자금공급자인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은 2000년 147개 업체에서 2007년말 101개, 2008년 3월말 98개로 줄어들면서 이들이 공급하는 신규 투자자금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⁸⁾

8) 현재 입법 예고된 자통법 시행령에서 집합투자회사에 대해 창투업 겸업을 허용하고 있고 반면 창투사는 투자의무비율 등을 통해 규제를 받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적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형 창투사들의 경우 창투업을 버리고 자통법 규제를 받으려는 곳이 늘어나는 상황임

- 이들 벤처캐피탈은 모험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성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축소되었다가 2006년 이후 회복 모습을 보임
- 벤처펀드의 경우 2002년 이후 신규 조합결성 보다 조합해산이 많아지면서 조합금액은 제자리걸음을 지속하고 있음

벤처펀드 결성 추이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합 누계(개)	476	495	487	466	409	394	388
금액(억원)	42,659	45,726	48,134	49,576	47,751	48,909	49,114

자료 : 중소기업청.

주 : 벤처펀드 = 창투조합+코리아벤처펀드(kvf)+신기술금융회사펀드.

- 2000년 이후 엔젤펀드의 신규 조합결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2006년 투자금액은 2000년 5,493억원에서 82% 감소한 971억원에 그침
- 신용이 다소 부족하나 기술력이 있는 신생기업에 투자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개인투자자들을 엔젤이라 하며, 그들의 자금을 엔젤펀드라 함

엔젤펀드 추이

연도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조합결성 (신규)	조합수(개)	7	57	7	1	3	2	4	1	3
	금액(억원)	151	361	19	5	16	12	25	4	10
투자액	업체수(개)	221	1,291	1,007	573	453	194	174	238	-
	금액(억원)	441	5,493	3,409	1,109	3,031	463	820	971	-

자료 : 중소기업청.

- 모태펀드 역시 2007년 말까지 75개 조합에 5,428억원 출자하여 2조 17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하였으나 그 규모가 빠르게 늘어가지 않는 상황⁹⁾
- 벤처 출자지원 사업을 보다 시장 친화적 형태로 운영하고 벤처캐피탈 시장의 선진화·고도화·국제화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2005년 모태펀드를 출범¹⁰⁾
- 2008년 3월말 현재 모태펀드 출자조합의 투자는 567개사, 7,627억원 규모

9) 모태펀드란 개별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각종 벤처 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Fund of Fund)'를 말함

10) 중소기업청 문화관광부 특허청 등이 모태펀드에 대한 출자자원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원 기능을 수행

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 추이

구 분	출 자			투 자('08.3월말)	
	조합수	모태펀드	결성금액	투자업체	투자금액
'04년 조합분할납입	7개	586억원	2,717억원	107개	1,942억원
'05년 출자조합	17개	1,245억원	4,063억원	241개	2,777억원
'06년 출자조합	26개	1,494억원	6,093억원	188개	2,288억원
'07년 출자조합	25개	2,103억원	7,297억원	31개	620억원
계	75개	5,428억원	20,170억원	567개	7,627억원

자료 : 중소기업청.

(5) 기술기업 변별력 취약

○ 정부의 시혜적 혜택을 목적으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변별력이 미미

- 기술과 같은 무형자산을 핵심으로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자사의 핵심가치를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검증이 용이하지 않은 미래형 무형자산을 기초로 한 자금공급은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큼
- 따라서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정책적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자체가 민간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조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성장성이 없는 기업들조차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고 노력함
 - 2007년 현재 일반 은행대출 금리는 6.9%인데 반해 정책자금 금리는 4.75%로 2.15%p 낮으며, 특히 고금리시기에 상대적으로 더욱 큰 폭으로 낮음
 -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책적 금융을 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혁신형 중소기업 기준 조건에 맞추는 사례가 많음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리와 일반대출금리 추이

	1996	1998	2000	2004	2006	2007
정책자금	7.0%	8.5%	7.5%	4.9%	4.4%	4.75%
은행대출	10.9%	14.9%	8.0%	6.0%	6.4%	6.9%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2008.1) KIET 보고서 인용.
주 : 정책자금 금리는 중소기업청 소관 정책자금 적용 평균금리임.

- 정책금융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수혜 기회를 오히려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
 - 정책금융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군은 대부분 시장금융의 기준에서 보면 위험도가 높은 대상임
 - 반면, 이들에 대한 지원 금리가 시장금리에 비해 우대일 경우 은행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융비용을 지불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함
-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은 민간부문의 역량 제고나 인프라 확충 노력이 미흡하여 장기적 정책 지향점이 불명확
 - 정책에 의한 기술금융의 공급확대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한 시적이어야 하나, 시장조성에 대한 이정표 없이 추진된 경향이 많음
 -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정책개입을 해야 할 지, 시장의 조성 발전과 연계하여 정책의 내용과 수준을 단계별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없는 상태임
-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없이 외형적 지표에 의한 금융지원은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의해 쉽게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망한 혁신형 중소기업마저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
 - 과도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은 부실의 노출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들을 연명 가능케 하는 것임¹¹⁾

11) 예컨대 2000년말 당시 벤처열기가 식으면서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 난에 빠지자 정부가 기술신보 등의 보증을 통해 자산유동화증권의 한 형태인 Primary CBO를 발행토록 해 주었으며, 2003, 4년 쯤 Primary CBO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중소기업 위기론이 나왔지만 정부가 만기연장한 적이 있음

3. 문제점과 개선 과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혁신형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지 못할 경우 고용 창출이 쉽지 않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
 - 혁신형 중소기업 활성화와 같은 미시적 정책보다 거시적 정책에 의존한다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
 - 혁신형 중소기업 금융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경우 고용 창출이 쉽지 않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
 -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금융지원이 신용이나 담보여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게는 돌아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최근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가 벤처버블 붕괴의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자금지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혁신형 중소기업은 외환위기 직후 벤처붐이 일어난 2000년에 크게 늘어났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2005년 당시 2008년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를 3만개로 육성할 계획을 밝힌 이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신정부 인수위원회에서도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강력히 표명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추이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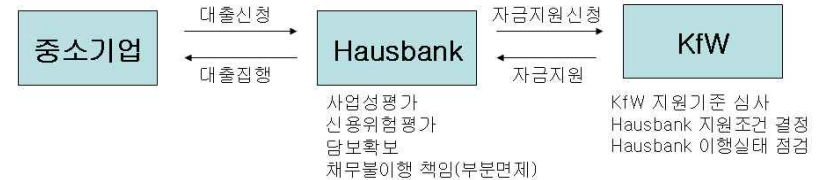
연도별	실 적								계 획	
	'98~'00	'01	'02	'03	'04	'05	'06	'07.12	'07	'08
벤처기업	15,774	11,392	8,778	7,702	7,967	9,732	12,218	14,015	15,500	20,000
Inno-biz	-	1,090	1,856	2,375	2,762	3,454	7,183	11,526	10,400	14,200
경영 혁신형기업	-	-	-	-	-	-	2,619	6,510	2,500	3,000
계	15,774	12,482	10,634	10,077	10,729	13,186	22,020	32,051	28,400	37,200
중복업체	-	699	1,134	1,519	1,890	2,455	4,508	7,332	5,400	7,200
합 계 (중복제외)	15,774	11,783	9,500	8,558	8,839	10,731	17,512	24,719	23,000	30,000

자료 : 중소기업청.

(1) 차별화된 정책금융

- 시장금융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정책금융의 유효성은 유지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시장금융과의 차별화 문제가 중요한 과제임
 - 은행 건전성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시스템에 의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대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정책금융이 필요
 - 중소기업 금융에서 시장실패 영역은 주로 상업적 논리의 은행 영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금융의 특성에 기인
 - 중소기업 정책금융이 변화 수용적이면서 중소기업 친화적인 형태로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필요
 - 독일의 부흥은행(KfW) 사례처럼 정책금융이 시장금융과 명백히 차별화되고,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또한 현재와 같이 다원화된 정책자금 지원을 중소기업 전문금융 공적기관 등을 설립하여 단일화시켜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성이 높음
 - 정책자금 대출 재원은 KfW가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KfW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주거대 상업은행인 Hausbank에 대출을 신청하고, Hausbank로부터 대출을 지원 받음
 - 뿐만 아니라 신용도 평가가 보다 엄격해지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형태의 메자닌 금융을 도입함으로써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활성화를 유도함¹²⁾

KfW의 대출 지원 경로



12) 메자닌(mezzanine) 금융은 자본과 부채의 중간성격의 자본으로서 경영권 간섭이 없는 자본으로 인정되는데, 정책금융 지원분의 일정 부분을 메자닌 금융 형태로 지원하여 해당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신용등급 향상효과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해당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

(2) 기술금융의 혁신

○ 기술 등의 무형자산이 핵심 자산인 혁신형 중소기업의 보유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기술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금융의 혁신이 요구

- 단기적으로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금융의 연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 기술평가 보증기능을 활용하여 기술평가와 기술과 금융의 연계를 제고
- 장기적으로 민간 기술금융시장의 구성을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
 - 기술평가 결과를 활용한 자금공급(투융자)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을 확립
 - 사업실패가 기술 사장(死藏)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술거래를 활성화
 - 평가기관 간 경쟁과 서열화를 통해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의 기술평가 활용도를 제고

(3) 투자은행을 통한 활로 모색

○ 혁신금융(risk-financing)의 필요성이 매우 큰 현실에서는 투자은행의 역할이 크게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투자은행(investment bank)은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달리 위험을 상품화하여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혁신 기업 등 중소기업 금융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근본적으로 중소기업금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과 거래 금융기관 사이의 관계금융(relationship banking) 시스템이 확립될 수 있는 새로운 금융방법의 수립이 필요한 바, 투자은행이 그 역할 담당이 가능
 - 우량 벤처기업의 탄생과 성장을 유기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벤처캐피탈의 대형화 유도과 이들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 적용
- 2009년 2월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회사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갖추어지면 이들이 중소기업금융 문제를 상당 부문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

- 해외 투자은행 가운데 벤처금융에 특화하여 높은 전문성을 지닌 경우가 적지 않은 바, 국내 증권사는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은행 능력을 제고해야 할 뿐 아니라 대기업 중심의 영업구조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

(4) 민간의 역할 강화

- 산업 정책적 필요성에 의한 혁신금융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민간부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음
 - 그동안의 정책적 지원 성격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역동성 부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기본적으로 각종 정책자금, 공적보증의 틀 안에서 취해져온 저리의 시혜적 지원을 줄여 나가는 한편,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임
-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물적·인적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관계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정보가 금융기관에 원활히 제공되어야 하고 금융기관도 거래기업의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함
 - 효율적인 민간지원을 위해서 개별기업의 창업단계에서부터 성장 및 성숙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영업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금융서비스와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
 - 중장기적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특화된 전문적 기업평가 기능의 확충과 중소기업 경영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전문 크레딧뷰로(CB)와 같은 정보집중기관의 활성화도 필요

박덕배 연구위원 (3669-4009, dbpark@hri.co.kr)

메 모